

## 한반도 통일정착을 위한 통일포럼

주 제 :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의 순방외교

발표자 : 주영환 교수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오후 6시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인문학관 243호

### 1. 서언

지금 남북관계는 통일의 단계는 아니지만,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2018년 4월, 5월, 9월 문재인-김정은 사이 등 모두 5차례가 열렸다. 이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시도는 매 정부마다 있어 왔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3차례 합의가 있었는데,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열리지 못했다. 다음 표는 그동안의 남북정상회담의 발자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남북정상회담 발자취

항 목	시 기	장 소
김대중-김정일	2000년 6월 13~15일	평양
노무현-김정일	2007년 10월 2~4일	평양, 백화원초대소
문재인-김정은 : 1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문재인-김정은 : 2차	2018년 5월 16일	판문점 '통일각'
문재인-김정은 : 3차	2018년 9월 18~20일	평양

## 2. 문 대통령의 순방외교

올해 들어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본격적인 순방외교에 나섰다.

### 1) 유엔 총회

9월 26일,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하였다.

### 2) 유럽 순방

문 대통령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섰다. 먼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ASEM이 열리는 브뤼셀에서도 메이 영국총리, 메르켈 독일총리, 콘체 이탈리아총리,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용커 집행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럽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3) 교황청 방문

문 대통령은 10월 18일 로마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북한방문을 요청하였다.

### 4) APEC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잇달아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통룬 시슬릿 라오스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펜스 미 부통령과 면담했다.

그리고 APEC이 열린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났다.

### 5) G20 정상회의 참석

11월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전날 열릴 예정인 11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일정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3. 대통령의 순방외교,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의 순방외교는 단독 정상회담을 통해 주로 양국 현안이 다루어졌지만, 대통령 순방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북 제재완화를 위하여 협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유럽국가들은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대북 제재완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실제로 ASEM 결의안에서는 대북 제재완화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대북 제재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대한 중요한 목표였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순방외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첫째, 국제사회의 여론을 그대로 보여주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가 어렵다는 현실의 벽을 느끼게 하였다.

둘째, 이러한 현실의 벽은 향후 남북대화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